
이슈브리프

2016. 11. 10

- Ⅰ. 미래세대가 적극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급 / 1
- Ⅱ. 개인정보 유출문제의 논쟁 및 시사점 / 7
- Ⅲ. 2016 두만강포럼(中 연변대) 참관기 및 정책 제언 / 13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미래세대가 적극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급¹⁾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안겨줄 부담을 짊어지게 될 미래세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그들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현행 정책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입법부 대표성 제고, 행정부 정책에 대한 미래세대의 참여 확대, 민간기구 및 시민운동의 활성화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문제제기

-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안겨줄 부담을 짊어지게 될 미래세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그들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저성장·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세대간 문제는 연금이나 복지 등 장기적 영향이 예상되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점점 더 부각될 수 있음
- 이에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세대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조정방안이 거버넌스에 반영되어야 함

1) 이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발간 “세대간 상생을 위한 정책거버넌스의 개선방향”(김희삼·김순희, 2016)의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하였음.

2. 세대간 상생을 제약하는 요인

① (급속한 사회변동) 압축적 경제성장과 교육수준의 급상승, 민주화, 정보화 등

- 급속한 사회변동은 연령대 간 경험과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에 큰 이질감을 가져와 세대차이를 크게 만들어 소통 장애와 갈등의 가능성을 높임

② (인구구조적 문제) 급속한 고령화와 극심한 저출산

-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비율의 급등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
- 이는 세대간 갈등을 단순한 문화적 충돌에서 고용, 연금, 복지 등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재정 측면에서도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그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복지지출의 증가는 향후 재정부담의 급증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높음

③ (노인빈곤과 청년취업난) 심각한 노인빈곤과 청년취업난 공존

-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고령층의 어려움과 자력으로 성공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청년층의 박탈감이 공존하는 현실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연령대 간 정치적 연대의 양상을 복잡하게 함

④ (낮은 정치력) 높은 사회적 갈등, 매우 낮은 갈등 조정능력²⁾

- 국민 상호간 사회적 신뢰가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으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한 편

⑤ (분단국가) 안보의 불확실성과 이념갈등 존재

- 북한문제를 상시적으로 안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은 통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보수진보의 스펙트럼을 뛰어넘는 이념적 갈등을 초래해 왔으며, 세대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갈등을 더욱 복잡다기한 문제로 만들고 있음

3. 세대간 상생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개선방향

【입법부의 대표성 제고】

○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미래세대의 권익을 명시적으로 대변하는 대리인의 등용에 활용

- 현세대 유권자의 이해관계보다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각 분야 전문가를 현행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에 입성시키면, 입법과정의 근시안적 인기영합주의 제어할 수 있음³⁾

2) 김선빈(2014).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3)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례대표제 의원들 중 일부를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래대표들로 선출하는 '미래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음.

- 또한 비례대표 일부를 연령기준으로 할당하여 젊은 의원 수를 늘리면 정치신인을 육성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음

○ 국회 내에 미래세대의 권익 대변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임위원회 설치

- 이스라엘 국회(Knesset) 내에 설치된 ‘미래세대위원회’의 사례
 - 입법이 미래세대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도입
 - 대중의 캠페인이나 토론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계의 주도로 설립
 -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법제화 과정에 간여할 권한이 있음
 - 정부부처, 공기업, 국영기관, 공사 등 모든 정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
 - 환경문제, 아동보호 등과 관련된 법안에 참여했으며, 학술단체의 자문을 받아 자원, 개발과 기술, 교육, 건강, 국민경제, 인구통계, 계획과 건설, 삶의 질, 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세대의 장기적 혜택을 고려하고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선거연령 조정에 대한 전향적 입장 검토⁴⁾

【행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 확대】

○ 대통령 소속 미래세대위원회 역할 확대

- 청년 관련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거나, 정책 수립時 미래세대 영향 평가항목을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함

4) 201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만 19세,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폴란드(만 21세)를 제외한 절대 다수인 32개국은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임

○ 청년을 포함한 주민참여제도 확장

- 최근 몇몇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청소년참여예산 제도로 확장되고 있음
-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제안 설명회와 예산제안사업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이해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 직접민주주의적인 의견 수렴

-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과 청년의 높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을 이용, 직접민주주의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 확대

【민간기구 및 시민운동 활성화】

○ 민간활동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음

- 헝가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사례
 - 국가로부터의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책결정보다 연구조사에서 폭넓은 역량 발휘, 미래세대의 권익 피해를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를 예방하는 선제성 발휘
 - 정치권의 미온적 반응에도 이 기구는 시민활동가, 과학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세대 보호 법안 기초
 - 2005년 6월 대통령선거에서 이 법안 작성자(초대 헌재소장)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법안 시행이 정치적 힘을 받게 됨

- 네덜란드의 ‘중앙기획국(Central Planning Bureau: CPB)’ 사례
 - 국가의 장기적 의제를 중립적 시각에서 연구하여 발표
 - 선거 때는 각 정당의 공약이 경제의 구조적 성장, 재정적자, 수지 균형, 노동소득 분배율, 미래세대에 대한 비용과 편익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경제장관이 형식적인 책임자인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기구로 보기 어렵지만,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음
 - 국가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분석과 재정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담당
- 민간활동은 시민에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참여 촉진에 효과적임
- 이를 통한 시민문화와 의식, 역량의 개선은 참여·숙의·협치를 추구하는 거버넌스의 궁극적인 토대가 됨

[작성: 노명순 연구위원 ☎ 02-2070-3326]

II. 개인정보 유출문제의 논쟁 및 시사점

ICT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매매행위로 규제강화가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규제의 정도는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하며, 매매행위 및 정보유출에 관해서는 엄격한 처벌 규제 강화가 시급함.

1. 현황

○ 정보유출 피해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52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¹⁾
- 2008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도 정보 관리자들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범죄 사례도 존재

○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현황

-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준이 상향됐지만,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수준에 비하여 처벌강도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1) 2014-2016,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현장 실태조사」

- 정보 유출 후에도 기업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²⁾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할 경우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음

<표> 국내 주요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구분	유출사	피해자수(명)	보상 및 판결
2008년	옥션	1000만	기업 승소판결
2011년	네이트	3500만	무혐의(증거불충분)
2014년	KB국민카드	5300만	기업(일부 승소판결)
2016년	인터파크	1000만	최소 10만원씩 배상 예상

2. 개인정보 유출의 3대 원인

§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관련 조항을 21회 개정하고 신설했지만, 보호법 내의 과태료 및 자율규제 등의 조항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정보주체(기업)들의 규제 인식도 부족한 상황임

○ 유출통지의무³⁾에 대한 기업의 인식 부재

-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유출통지의무를 지켜야하지만, 정보주체(개인)에게 유출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병원·약국에 대해서는 유출통지의무가 면제되어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음

2)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3항,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조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동의사항 공지에 관한 문제

- 현행법상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동의사항을 글자크기와 가독성에 상관없이 공지만 했다면, 정보유출 사고 후 처벌 不可
- 이용자가 공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도록 글자크기를 고의로 줄이거나 뒷면으로 숨기는 ‘공지편법’ 사례도 나타남

○ 과태료 조항의 문제

- 기업의 자율규제에 관한 부분 때문에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조항 또한 기업의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가 전부이며, 엄격한 형사처분 대상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3.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 논란

○ 규제 완화 입장

- ㉠ 개인정보의 규제범위를 축소시켜 정보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규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정보 데이터의 잠재적 결합만으로도 규제를 받으며, 사용자 동의를 일일이 받는 절차도 사실상 不可
 - 빅데이터 산업의 경우 데이터 정보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 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안전한 정보 관리 가능
 -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장치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컨설팅 및 서비스·솔루션 시장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함

○ 규제 강화 입장

- ㉕ 개인정보 매매 행위에 관한 규제 미비
 - ‘개인정보 매매금지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매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고객정보 판매로 5년간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사례도 있음
 - ※ 개인정보 매매행위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㉖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⁴⁾ 개정으로 규제 강화
 - 민간사업체 중 88%는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없고 55% 이상⁵⁾은 정보관리 업무부서 자체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를 규제를 통해 강화해야 함

4. 해외사례

○ 미국

- 공공기관의 정보는 강한 규제, 민간기업의 정보는 자율규제
- 공공부문은 예산관리실을 주체로 프라이버시법을 집행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 또는 자기통제에 맡김

4)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가 안전 분야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5) 행정자치부 ‘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 일본

- 빅데이터 산업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익명가공정보’ 신설
-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 확보를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익명가공정보’ 신설

※ 2015.3월 정부안 확정, 9.3일 중의원 본회의 가결 및 성립

○ EU

- ‘일반 정보보호규칙(안)’을 통한 자유로운 개인정보 유통
- EU의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충분히 갖춘 국가는 추가요건 없이 개인정보 이전 및 자유로운 유통 가능

※ 2015.6월 최종안 협상(룩셈부르크 회의, 2015.12.15 법안 합의)

-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⁶⁾를 통한 자국민 개인정보 유출 보호
 - ‘세이프 하버⁷⁾’ 무효화 판결에 이어 <프라이버시 쉴드> 조약을 체결해 他국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제 마련

6)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미국기업이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EU와 미국이 체결한 협정

7) 세이프 하버: 2000년 미국기업들이 EU의 주권 지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미국으로 이전해 보관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

5. 시사점

- ICT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의 균형잡힌 개인정보 규제에 관한 논의 필요
- 국내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자국민 정보보호체계가 필요
- 아울러,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국가와의 정보교류 관련 협정 체결 시급
- 유출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시급
-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운영 시스템 및 정보보호 조치 방법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에 관한 법률 조항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

[작성: 김신의 연구원, 이강해 객원연구원 ☎ 02-369-7939]

Ⅲ. ‘2016 두만강 포럼’(中 연변대)¹⁾ 참관기 및 정책 제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최된 ‘2016 두만강포럼’에서 북측 참가자들은 한국과 중국측 인사들의 북핵문제 제기에 대해 과거와 달리 특별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이같은 국제행사에 북측학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활용, 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중국동포 학자·학생·기업인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통일한국의 우호세력으로 협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임

1. 포럼 주요내용

- 2016.10.15~16, 한국고등교육재단·연변대학 공동으로 “조화와 포용: 두만강지역 국제협력 교류의 신(新)통로”를 주제로 ‘제9회 두만강포럼’ 개최
 - 두만강 포럼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국제회의 중에서 북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국제행사
 - ※ 한국고등교육재단은 2008년부터 중국 연변대학에 일정한 재원을 지원하여 ‘두만강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포럼에서 북한학자(김일성종합대학)들과의 공식적 만남 가능
 - 포럼의 목표는 동북아 역내국가간 자유개방적인 교류와 협력환경을 상호 조성, 정치적으로 신뢰하고 경제적으로 융합하며 문화적으로 포용하는 협력공동체 구축

1) 두만강포럼은 북한학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행사

-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 독일 국적의 학자 및 200여명의 중국 학자들이 포럼에 참석, 5개 분과 포럼(경제, 문화, 문학, 철학, 법률) 및 '중국-북한학자 대화' 진행

※ 북한측 참여자 명단(김일성종합대학) : 정만호(부총장), 리원철(철학부 강좌장·교수·박사), 리성혁(외국어학부), 리영남(경제학부), 김철웅(법률대학), 김성일(철학부), 김명옥(법률대학 박사·교수), 리광희(역사학부 박사), 은종섭(문학대학 원사·교수·박사), 김려숙(문학대학 교원)

○ 개막식 축사의 남북한 상황 인식

- 연변대학 박영호 총장에 이어 한국측 그리고 북한측 인사말로 이어지는 순서로 개막식 축사 진행

※ 과거에는 한국측의 개막식 축사까지 일일이 북한측이 검토한 후 참석 하였음

- 한국측의 북핵문제 언급과 중국측의 북핵문제 해결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북측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중국측 및 국외 참여자들이 놀라워 함

※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측은 회의에 불참하던지 아니면 현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음

- 오히려, 대북제재국면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북한측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 포럼 북측(리영남) 기조발표 내용

- 리영남(김일성대 경제학부 교수), ‘동북아지역경제발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선경제지구 활성화’ 주제 발표
-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진척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는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 정치적 입장과 영토문제 등에서 일련의 모순과 차이가 있기 때문
-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주된 요인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정치·군사·안보 분야의 방해 책동에도 있음
- 특히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고립 압살과 군사적 위협, 경제봉쇄 등으로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세가 조성되고 이 지역국가들간 비정상적 관계가 발생
- 동북아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요구에 복종하기보다는 철저히 자주적 입장에서 호상 신뢰를 도모하고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나선경제무역지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바다를 통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진출의 거점으로서 라진항을 이상적인 대상으로 인정
- 미국과 서방세력의 대북제재와 긴장격화 책동으로 라진항의 개발과 이용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

- 현재 중국은 라진항 1호 부두(2009년)와 4-6호 부두(2010년)를 개발하여 50년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였지만, 조선반도 긴장격화 등의 요인으로 개발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음

○ '중국-북한학자 대화' 주요내용

- 이번 포럼을 포함하여 도합 세 차례 '중국-북한학자 대화' 진행, 과거 두 차례(2014, 2015)는 모두 북한의 개혁·개방과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경제분야 토론
 - ※ 과거에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비롯해서 나진경제무역지구의 발전 도모, 중국의 一帶一路,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동방정책, 그리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으로 연계되는 동북아의 발전 모드로 인해 포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했음
- 이번 '중국-북한학자 대화'는 경제와 국제관계 두 방면의 의제로 진행
 - ※ 참석자 : (북한측) 김일성종합대학 철학학부, 법률학부, 외국어문학부, 경제학부 등 4명, (중국측) 청화대학, 중국사회과학연구원, 복단대학, 길림대학 및 연변대학 등의 6명의 교수, 그 외에 사회자(연변대) 1명을 포함 총 11명의 학자들이 참여
- (중국측) 북한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요인에 대한 분석과 북한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을 분석, 북·중간 농촌경제협력 강화에 대해 발표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 (중국측) 북중관계를 현재 어정쩡하고 애매한 관계로 정의

- (북한측) 북한 핵보유의 내재적 동기 및 국제교류에서의 기본입장에 대해 진술. 한반도의 안전 정세의 악화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한미간 군사적 도발 등에 원인. 또한 군사역량이 강대해야 발언권이 있고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특히 현단계 한반도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 및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비판

- 북·중 우호관계 발전에 대하여

- (중국측) 북중관계의 유연한 사고를 제기, 북중간 핵문제를 제쳐놓고 어떻게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 (북한측)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반도를 대할 것을 요구. 중국이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 抗美援朝시기에 중국의 파병에 아주 감격해하며 북한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

[抗美援朝전쟁]

- 중국이 6·25전쟁을 부르는 용어,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덕화이(彭德懷)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을 결성하여 1950.10.19부터 1차로 26만명의 병력으로 압록강을 건너 전쟁에 개입, 최초의 전투 개시일인 10월 25일을 ‘중국인민지원군의 날’로 기념
- 2010년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은 ‘抗美援朝전쟁 참전 60주년 좌담회’를 개최하여 참전노병들을 초청한 가운데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며 참전의 당위성을 강조,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들이 특별코너를 개설해 기사와 사진 등 대거 게재

2.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

- 북측, 대북제재에 대응한 적극적 공세의 한 형태로 국제대회에 북한측 학자의 활발한 참여
 -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언급은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항미원조의 혈맹을 강조,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 및 對美문제로 결론을 의도적으로 유도
 - 북한 핵보유의 정당성 설파와 강한 군사력만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 전개, 미국의 對北 적대시 정책과 한-미 연합군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리 귀결
- 두만강포럼은 북한학자들을 지속적으로 초청,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
 - 연변대학은 북한학자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여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학자들의 대화를 유도하고 협력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 미미
 - 보다 공식적이고 국제적인 포럼으로의 발전을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을 포함, 보다 많은 북한 연구기관을 초청하여 실질적인 포럼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음

○ 제3지대에서 북한학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성 제기

- 중국·러시아 등 제3지대에서 북한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포럼의 조직 및 지속성 유지 필요
- 이를 통해 북한 지식인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만함

○ 중국동포 학자·학생·기업인 등을 발굴, 통일한국의 우호세력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동포 학생들을 비롯한 동포학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한국의 對北·對中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통일한국이 중국을 비롯한 중국동포들에게도 실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와의 충돌은 피하면서 이들이 실질적인 통일한국의 조력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또 중국동포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한·중 FTA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하고, 이들이 북한 개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작성: 통일연구센터]